

정대협 : 제 93-48호

1993. 7. 24

수 신 : 언론사 여성단체 담당기자, 사회부 기자

제 목 :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피해자중언청취단
방한에 대한 입장 표명의 건

* 보도자료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피해자 중언청취단 방한결정에 반대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4월 9일 일본정부의 중언청취를 위한 한국방문계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의 중언청취 의도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진상규명에 있다기보다 국제적 압력이 커지기 전에 강제연행사실 부분인정으로 조기타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대협은 일본정부에게 피해자 중언청취에 앞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발굴, 조사하여 2차 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정대협의 의사는 몇차례씩 정대협과 한국정부 정신대실무대책반, 그리고 일본대사관측과 만나면서 충분히 전달되었고, 서로 이해가 되었던 점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7월 들어 정대협에는 비밀로 하고,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접촉하여 단 며칠간의 면담을 통해 일본정부의 중언청취 방안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대협과 아래의 일본「종군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에 속한 17개 단체는 더욱 더 일본정부의 중언청취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분명히 중언청취를 마지막 절차로 해서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줄속적으로 은폐, 축소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본이 1차보고서를 발표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일본내에 강제연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대신에 피해자 중언청취를 통해 인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는 여전히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해결의지 없이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여성들을 강제연행하고, 군대의 성적 노예로 학대하고 패전시에는 집단 학살했던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성실하게 지지않는 한,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시아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아시아지역의 여성들을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유린한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중언청취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붙여 은폐, 축소 조작에 피해 당사자들을 이용하는 기반적인 작태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도 일본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은폐, 축소 해결조작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어떠한 줄속적 타협에도 응하지 않고, 도덕적 우위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1993년 7월 2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이화민주동우회, KNCC여성위원회, 기장여교역자협의회,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 두레방, 천주교 새하늘을 여는 여성공동체, 카톨릭여성복지위원회, 여성교회, 정신대연구회, 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기독교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 민족문화작가회의여성위원회)

일본종군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 단체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일본 YWCA, 일본 NCC부인위원회, 우리여성네트워크, 性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일본 그리스도교부인교동회, 일본부인회의,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회, 조선인 위안부의 집을 잔존하는 실행위원회, 마쓰시토대본영을 생각하는 회, 전후책임과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실행위원회, 평화유족회 전국연락회, 매매준을 생각하는 회, 도라지회, 아시아여성들의 회, THE RIBBON URAWA)